

‘유가·환율·보호무역’ 부담가중… 수출 중심 한국경제 ‘흔들’

유가 급등에 항공업계 수익 비상
반도체산업, 헬륨 등 공급망 위기
“전쟁 장기화 댄 교역 등 피해 확산”

국내 산업계가 유가 급등,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하며 복합 위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불확실성이 제조 원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겹치면서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중동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유조선 피격 소식이 전해지며 공급 불안이 증폭된 결과다.

당장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항공업계는 비상이다. 연료비 상승분만큼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4월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4월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성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책정된다. 4월 적용 평균가는 배럴당 160달러(3월 약 86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로스앤젤레스(LA)의 유류할증료는 7만8600~7만9500원이지만 단순대입하면 4월 발권시 해당 노선의 편도 할증료는 2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단거리 노선인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 역시 현재 1만~3만원대에서 5만원대 이상으로 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유가 급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도 재무적 압박을 키우고 있다. 항공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특성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원료인 나프타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한화솔루션의 주요 원료 공급처인 여천NCC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공급 중단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 산업도 공급망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도체 웨이퍼 냉각용 헬륨(카타르산 64.7%)과 식각 공정용 브롬(이스라엘산 97.5%)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기적으로 재사용 헬륨 비중을 19%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80%를 카타르에서 수입하

고 있어 부담은 크다. SK하이닉스는 중동 전쟁 이후 현재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당장의 생산 차질은 막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헬륨 소요량이 급증한 점이 최대 변수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가스다. 웨이퍼 공정이 진행되는 장비 내부 ‘챔버’에서 공정이 끝난 뒤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나노미터(nm·10억 분의 1m)급의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공정 특성 상, 이 과정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헬륨이 사용된다. 최대 99.9999%(6N) 순도의 헬륨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는 확보했지만 전쟁 장기화 시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한 비용 상승과 물류 대란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13일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예고해 보호무역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관

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현재 15% 수준인 자동차 관세가 과거 논의됐던 2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과잉 생산’을 문제 삼고 있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타격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광호 연구위원은 “대의 불확실성 확대에 유가가 급등하며 소비자물가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내 핵심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는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대중동 경제협력 대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동 경제협력은 대부분 G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GCC 산유국으로의 전선 확대가 중동과의 경제협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동안 다방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던 만큼 에너지 수급, 교역, 건설 수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정부, 보험업권 영향 점검… “기업·선박 보장공백 최소화”

금감원, 보험업권 CFO 긴급 소집
위기대응계획 수립·이행 적정성 점검

중동 전쟁 격화로 보험업계의 선박보험·재무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한국 기업과 선박의 보장 공백을 막는 현장 대응이 시급해진 데다 유가·금리·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기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 재무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보험사 14곳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긴급 소집해 중동 상황 악화가 보험업권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사 재무건전성 영향과 함께 중동 지역 내 한국 기업·선박의 보장 공백 최소

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원수사와 해외 재보험사 간 정산 지연으로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보험사를 긴급 호출한 것은 이번 중동 리스크가 더 이상 유가나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해상보험 익스포저는 총 1조6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박보험이 9796억원, 적하보험이 7067억원이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42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 3328억원, 현대해상 2843억원 순이었다.

아직 국내 선박의 직접 피격이나 보험금 접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

태가 장기화할 경우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보험 조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 일부는 기존 보험을 취소하고 위험을 다시 반영한 새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위험 특약 보험료율도 통상 선박가액의 0.25% 안팎에서 최근 1~3% 수준으로 뛰여 5~10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한 척 가치가 2억~3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항해 한 번에 보험료 부담이 수백만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 해상보험 시장의 긴장도도 높아

지고 있다. 런던 해상보험시장의 공동전쟁위원회(JWC)는 지난 3일 바레인, 지부티,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인근 수역까지 고위험 해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로이터는 걸프 지역 전쟁위험 보험료가 일부 구간에서 1000%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충격이 해상보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업권은 자산운용 구조상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권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 투자 비중은 70.9%에 달한다. 채권 40.8%, 외화유가증권 11.4%, 수익증권 9.9%, 주식 5.1% 등으로 구성돼 있어 중동발 충격이 유가 상승, 장기금리 변동, 달러 수요 확대, 자산가격 조정으로 변질 경우 건전성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

다. 금감원이 이번 간담회에서 보수적 자산건전성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외 사모대출과 해외 부동산 등 경기민감 자산은 1차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리·주가·환율뿐 아니라 해지율·손해율 등 보험위험까지 함께 반영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필요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일시적 자금 차입 허용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동발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보험사에는 선박보험 손해 부담, 재보험 정산 지연, 자산건전성 저하가 동시에 밀려올 수 있다는 얘기도.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별 복합위기상황분석과 자체 위기대응계획 수립·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범정부 ‘사막의 빛’ 작전… 국민 204명 귀국 지원

“현지 상황 주시… 안전조치 지속”

중동지역 국가들에 체류하다가 이란 전쟁으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인 7명 등 민간인 211명을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5일 오후 우리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 중인 모든 국민이 한 번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막의 빛’ 작전을 개시했다.

이번 우리 국민 귀국 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등 4개국에 각각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일시에 한 곳으로 집결시켜 수송기에 태우는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진행됐다.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공군은 물론, 주사우디대사관, 주바레인 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에 외교부와 함께 참여한 경찰청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원팀’으로 추진됐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경로에 있는 10여개국으로부터 단 하루 만에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외교·국방 관계자들은 실시간으로 소

통했다.

이번 작전의 성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현 외교부장관과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지난주 각각 사우디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과 통화해 사우디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은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며 군 수송기의 항로를 추적하고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공군은 작전 준비부터 종료까지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하며 작전을 실행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88만원 정도(성인 기준)를 청구할 예정이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metro

“반도체업종, 실적 추정치 상승… 투자 유효”

>> 1면 ‘어닝쇼크 수두룩…’서 계속

시장 전망치를 가장 큰 폭으로 웃돈 기업은 대원제약이었다. 대원제약의 4분기 영업이익은 58억원으로 컨센서스(6억원)의 약 10배에 달했다.

엘앤에프의 영업이익은 825억원으로 컨센서스(187억원)의 4배를 웃돌아 두 번째로 상위 폭이 컸다. 녹십자도 4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컨센서스(11억원)의 4배에 달하는 실적을 냈다. CJ C GV(103.3%), 인텔리안테크(93.1%), 미래에셋증권(92.5%), CJ ENM(79.8%), 컴투스(79.0%) 등도 기대치를 웃돈 곳들이다.

증권가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 눈높이

도 낮추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일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제시된 146개 상장사 중 3개월 전 대비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상장사는 68곳이다. 전체 상장사의 47%가 3개월 전 대비 1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것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동 사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국내 실적 추정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정유, 증권, 금융업종 등의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대비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투자가 유효하다”며 “이밖에 조선, 방산 업종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원 기자 zelkova@